

Special Issue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This article is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For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of the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s. With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were listed as one of the nationally licensed professionals in the mental health field and involved in delivering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 Four articles were included in the special iss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activities of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their roles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in Korea, and their research competence indicated by the number of published research articles on the outcome of CBT. Results of survey were presented on the clinical psychologists' professional self-views, major roles, activities and affiliations, theoretical orientations, and use of evidence-based practice. Comparison between American and Korean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were also made to highligh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ervice delivery methods,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ion criteria and the insurance policies. Finally future directions for roles, professional activities, training, legislation and mental health policies were discussed.

Keywords: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mental health professional, training, mental health service delivery, insurance policy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급속한 사회변화를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물질만능주의와 성과지상주의가 전통적 가치를 대신하게 되었다. 공동체 의식과 배려의 문화는 사라지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얻게 되었지만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실태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성은 부족하고 그 질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

을 마련하였다. 주 내용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별검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의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낮추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초 정신과의사가 실시하는 상담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낮추는 한편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료법의 틀 안에서 정신과의사 중심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마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본 특별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명해보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64년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창립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임상심리학자들은 임상심리

[†]Correspondence to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1 Jongam-ro,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junghye@korea.ac.kr

Received Apr 30, 2018; Accepted May 02, 2018

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제도의 정립, 과학자·임상가 모델에 근거한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수련기관과 기준의 확립,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임상심리학자들이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에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임상심리전문가는 거의 1,500명(2018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배출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대략 2,500명(1급 1,227명, 2급 1,346명, 이들 중 약 60%는 임상심리전문가임)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인력이 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 함으로 국내 정신건강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가의 여부는 비단 임상심리학의 발전뿐 아니라 국내 정신건강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본 특별호에 포함된 논문은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을 소개한 논문(Kwon, 2018),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활동, 교육 및 수련 실태를 살펴본 논문(Won, Choi, Bae, Bai, & Lee, 2018),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비교한 논문(You & Lee, 2018), 한국 임상심리학자들의 인지행동치료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다룬 논문(Park, Song, Lee, & Choi, 2018)으로 총 네 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첫 번째 논문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의 특성, 근무지, 주요활동,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태도 및 수행 정도, 만족도를 조사해서 현황을 확인하고, 2007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한 논문이다. 조사 결과 임상심리전문가의 주된 역할과 전문 활동 및 주요 근무지에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족도도 더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주로 병의원을 중심으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래의 주 역할로 심리치료자를 희망하는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으로 인지행동이론을 택한 전문가가 늘어났다. 또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근거기반 실무를 상당히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기반 실무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후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정신건강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근거기반치료를 제공하는 주요한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전체 정신건강전문 요원의 17.3%를 차지하고 있어 수적으로는 열세이나 다른 직역에 비해 1급의 비중이 높고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1급의 양성에 주력해왔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

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학사급 수련을 늘려 2급 임상심리사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수련과정에 상담정신치료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1급 임상심리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논문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지역 정신건강센터는 보통 팀제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주민에게 일차 진료의사와 임상심리학자가 협업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의학적,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효과성과 이용가능성을 증가시켜 왔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정신건강서비스의 이용률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자의 서비스를 보험 적용하고 점차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서비스까지 보험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여 나갔다고 한다. 저자들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법을 놓고 비슷한 문제를 겪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하였다.

네 번째 논문에서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 112편과 이들 중 무선할당 통제 연구 50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소속을 분석하여 임상심리학자의 인지행동치료 관여도와 연구역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지행동치료 연구 주 저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임상심리학자(54.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동상담전문가(12.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8.9%)였으며, 무선할당 통제연구에서도 역시 임상심리학자가 주 저자인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58.0%). 인지행동치료가 근거기반치료로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지행동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인지행동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네 편의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근무지와 활동 현장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병의원과 대학을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10년간 국공립기관이나 지역건강센터에 일하는 전문가들이 약간 늘어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사업에 참여하고 정신건강예방사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상으로는 각 직역의 역할과 성격이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현장에서는 업무 분담이 불분명해서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급여 수준도 대체로 낮은 형편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센터에서 경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이나 업무분담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대학원 교육과 수련에서 상담심리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인지행동치료 등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훈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에서 심리치료에 대한 기초 교육과 훈련을 갖춘 임상심리학자들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근거기반 심리치료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넷째,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정신건강사업에서 업무가 확대되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심리서비스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hk, Y., Song, H., Lee, J., & Choi, K. (2018). Expertise of Clinical Psychologist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South Korea: Research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S33-40.
- Kwon, J. (2018). A 2018 survey on clinical psychologis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S4-12.
- Won, S., Choi, Sun., Bae, G., Bai, D., & Lee, J. (2018).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a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S13-23.
- You, D., & Lee, Y. (2018). A Comparison of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South Korea and U.S: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 in Local Commun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S24-32.

국문초록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의 전문역량, 활동 현황 및 발전방향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은 그 수가 급증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현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전문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특별호에서는 임상심리학자들의 활동 현황과 전문역량 및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은 만족스럽지 않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이용률도 낮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서 임상심리학자가 어떤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주요 활동과 역할은 어떠한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특별호에 포함된 논문은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을 소개한 논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활동, 교육 및 수련 실태를 살펴본 논문,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비교한 논문, 한국 임상심리학자들의 인지행동치료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다룬 논문으로 총 네 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이 네 편의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고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임상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정신건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한국 임상심리학자,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련,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보험정책